



주간통일정세 2010-03(2010.01.11~01.1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03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정보통신 장비공장 시찰(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강동 약전기구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김 위원장은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 사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며 “이들의 훌륭한 모범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또 “공장에서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는 공장 지도일꾼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에 맞게 생산, 기술발전, 후방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진행한 결과”라고 평가했다고 통신이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 동행한 간부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 왕자루이 출장..김정일 1월내 방중 어렵다(1/1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월 방중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이달 내 방중이 사실상 어렵다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 포착됨.
  - 김 위원장의 방중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6개국 순방에 나서는 것임.
  -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이 당 대표단을 이끌고 15일부터 26일까지 콩고민주공화국(DRC), 말리, 세네갈, 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지부티 등 아프리카 6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함.
  - 북한 내각에서 공식 직함이 없는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방중해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공식 실무와 수행은 각국 정당 간 외교를 책임진 대외연락부가 전담함.
  - 따라서 대외연락부의 수장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15일부터 26일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복수의 베이징 소식통들은 14일 분석함.
  
- 北김정일, 군부대 양돈장 잇달아 시찰(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534부대 산하 ‘10월7일 돼지공장(양돈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이 통신은 지난 12일에도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제313대연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돼지우리와 고기가공공장, 부산물가공장 등을 돌아본 후 “10월7일 돼지공장은 군인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후방기지의 하나”라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축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 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자”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밝힘.
  - 이번 현지지도에는 북한군 대장인 현철해, 리명수 등 군대 지휘관부들과 노동당의 김기남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희 경공업부장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일 생일에 미국인 방북 허가(1/16, RFA)
    -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미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이 처음으로 허용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북한전문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의 말을 인용, “미국인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생일 축제 기간인 2월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이 방송은 “북한이 오는 4월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도 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가 풀리면 미국인 관광객은 연중 언제든지 방북할 수 있고 체류기간도 최대 10일까지 늘어나며 중국에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北육해공군 ‘무력시위’..김정일 참관(1/1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 이번 훈련 참관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의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비난하며 ‘보복 성전’을 거론한 후 첫 ‘무력시위’ 성격을 띠는 점에서 주목
    - 김 위원장이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잇따라 오르면서 군통수권을 장악한 이래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인민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을 북한 언론이 소개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
    - 이번 참관에는 리용무.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국방위원회 겸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국방위 위원 겸 군 총참모장, 최태복,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중앙위 책임간부와 군부대 지휘관들, 국방공업 부문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 사회 책임일꾼 등이 대거 동행
    - 훈련장에서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 지휘부 성원들과 육해공군 및



각 병종 사령관, 군 장성들이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고 방송했으나, 정확한 훈련 장소와 일시는 언급하지 않음.

## 나. 정치 관련

- 北, 당국제부장에 김영일 외무성부상 임명(1/14, 조선중앙통신)
  - 공석이던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에 외무성의 중국 담당 김영일 부상이 임명된 것으로 14일 확인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국제부가 주북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신년 연회를 개최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함.
  - 당 국제부장은 김양건 현 국방위원회 참사 겸 당 통일전선부(통전부)장이 2007년 초 통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최근까지 줄곧 공석으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신임 국제부장은 1945년생으로 평양외국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했으며 1975년 당 국제부 지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외교부(현 외무성) 부부장, 리비아와 튀니지 대사를 지내는 등 외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임.
  - 초기 경력에서 보듯이 원래 ‘아프리카통’이었으나 2000년께 외무성 중국 및 아시아 담당 부상으로 임명되고 2003년 베이징 북핵 6자회담 1차 회의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후 ‘중국통’으로 분류됨.
- 北국방위, 南‘급변계획’ 비난..“성전 개시”(1/15, 조선중앙통신)
  -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행동 계획을 최근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북한의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복 성전”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비난
  - 북한 국방위가 1998년 최고 권력기관으로 된 이후 국방위 또는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 북한 국방위는 15일 대변인 성명에서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며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라고 주장
  - 이어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도발 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건(상황)에서, 청와대를 포함해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
  - 특히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 민족적이고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 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도발과 테러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
- 성명은 또 “남조선 당국이 저지른 반공화국 죄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6자회담이나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임.
  - 이와 함께 성명은 “‘비상통치계획-부흥’을 꾸며낸 본산지인 남조선의 현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무엄한 대결계획 작성의 주모자들을 민족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엄벌에 처하는 응분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
- 北, 국방위 성명 주민들에겐 함구(1/16,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15일 남한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보복성전’을 다짐하는 등 전례 없이 강경한 대남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은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음.
  - 북한은 15일 오후 6시8분 해외로 타전되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자비한 타격으로 반공화국 모략소굴을 송두리째 날려 보낼 거족적인 성전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처음 내보냄.
  - 이어 30여 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4분에는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서만 성명 내용을 보도
  - 이후 평양방송은 같은 날 오후 8시10분과 16일 오전 7시10분에 각각 성명 내용을 다시 방송
  -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대내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물론 조선중앙TV도 이 성명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음.
- 北매체 속 대남기조는 ‘안갯속’(1/17,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5일 남한의 급변사태 대비계획 보도를 내세워 ‘보복 성전’을 선언한 후 북한 주요 매체에서 대남 언급이 사라져 주목됨.
  - 17일 연합뉴스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비롯한 주요 신문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등 방송·통신을 모니터링한 데 따르면 신년 공동사설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줄곧 강조하던 북한 언론들이 16일부터 대남 관련 뉴스 보도를 일제히 중지함.
  - 일례로 노동신문은 16일자 8면 중 7면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돼지농장 방문 기사와 사진을 실는 데 할애했고 17일자에서도 대남 기조를 드러내는 기사를 전혀 게재하지 않았으며, 대외용인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주간지 통일신보만 16~17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



#### 다. 경제 관련

- 北-中 민간교역, 화폐개혁 이후 ‘올스톱’(1/12, 연합뉴스)
  - 북한의 화폐개혁 단행 이후 북·중 간 민간 교역이 사실상 올스톱 됨.
  - 12일 중국 단둥(丹東)과 옌변(延邊)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1일 북한이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한 달 여간 북한과의 민간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
  - 대북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단둥(丹東)에서는 최근 북한을 오가는 화물 차량이 하루 3-4대에 그침. 화폐 개혁 이전 수십 대에서 많을 때는 100여 대의 차량이 운행됐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것임.
  
- 北, 외화사용 엄격 단속..사용처 제출요구(1/14,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외국인에 대해서도 환전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북한 내 외화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북·중 무역업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14일 전함.
  - 지난해 말 북한 라선시를 방문했던 한 무역업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외화 사용이 금지됐고 외국인은 모두 은행 등에서 환전을 하도록 의무화함.
  - 또 환전을 위해서는 은행 등에 가서 신청용지에 이름과 소속, 여권번호 등 개인 정보와 소지한 외화 금액을 적고 전액을 북한 새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이 업자는 말함.
  - 귀국 시에는 재차 은행 등을 방문, 남은 북한 화폐를 모두 외화로 바꿔야 하고, 특히 이때는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얼마를 지불했는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등 상세한 사용처를 적어 내도록 북한 당국은 요구하고 있음.
  
- 北, 황해북도 ‘신평금강명승지’ 개발(1/15, 조선신보)
  - 북한이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읍에서 동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신평금강명승지’를 개발 중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5일 보도
  - 조선신보는 ‘신평금강명승지’에 대해 예전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려온 신평군 도화리 도화동 일대로, 마식령산맥 남부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은 “아호비령산줄기를 구성하는 희량산, 생왕산, 만년산을 비롯한 높은 산지의 골짜기를 따라 펼쳐져 있다”고 설명함.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신평금강명승지’ 개발에 착수한 이후 현재 약 5km 구간의 관광도로 노반작업이 끝난 상태고, 내년 중 탐승로, 휴식장, 전망대, 매점 등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함.



● 中, 나진항 통한 동해 진출 초읽기(1/15, 연합뉴스)

-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중국이 북한 나진항을 통한 동해 진출을 바짝 서두르고 있음.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는 15일 “조만간 훈춘-나진항 통로가 열리고 중국의 나진항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
- 훈춘시 통상관리판공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북한의 승인을 얻었고 중국 중앙정부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국무원 최종 승인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나진항 이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전함.
- 이에 앞서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 개발 및 전용권을 따내 나진항 진출 길을 열었음. 창리그룹은 나진항 부두 개발 대가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훈춘시 팡촨(防川)과 마주한 북한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에서 나진항을 잇는 도로를 신설해주기로 북한에 약속하였으며, 이어 최근에는 훈춘시가 팡촨과 원정리를 연결하는 두만강 다리를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나선시 경제특구를 방문, 대흥무역회사 등을 현지 지도하면서 “나선시는 중요한 대외무역기지”라며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中, 나진항 이어 청진항 진출 본격화(1/17, 연합뉴스)

- 중국이 나진항 부두 사용권 확보에 이어 청진항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북한을 통한 동해 루트 다각화와 대북 교역 확대에 의욕을 보임.
- 대북 소식통은 17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는 노후한 투먼-청진항 구간 철도를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면서 “투먼시가 170km에 이르는 이 철도 보수를 위해 북한 측에 1천만 달러를 장기 차관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전하면서, “오는 4월부터 보수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함.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정부도 지난 14일 열린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 전망 계획 지도소조’ 제1차 회의에서 투먼-청진항 철도 보수 계획을 공개했다고 연변 소식통들이 전함.
-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이 지난해 10월 훈춘-나진 구간 도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나진항 1호 부두 전용권을 확보한 데 이어 지린(吉林)성도 지난해 11월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보세, 가공 수출이 가능한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 개발키로 북한과 합의함으로써 중국의 나진항 진출은 이미 가시화됐지만 청진항 진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어떠한 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또 “북한에서 겨울 폭설은 꽤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각급 지역의 적십자 위원회는 폭설에 대한 재난 대책도 세워놓았을 것”이라고 덧붙임.
-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8일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에는 북한의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가 온통 흰색으로 보여 북한에도 폭설이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마커스 대변인은 이어 “IFRC가 북한에서 펼치는 재난 대비·대응 활동은 각급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각 지역의 재난 위험을 판별해 대응책을 세우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 내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결정한다”고 전함.
- 그는 IFRC의 올해 대북사업에 대해 “북한주민 800만여 명에게 계속 기초약품을 제공하고 진료소와 후송병원, 인민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약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밖에 북한의 지역공동체들에 식수 시설과 화장실을 추가로 지어줄 계획”이라고 덧붙임.

● 北, 인권 ‘최악 중 최악’ 그룹(1/13, 프리덤하우스)

- 북한이 지난해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측면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Worst)’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2일 전 세계 194개국과 14개 자치령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보장 수준을 분석한 2010년 보고서에서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버마(미얀마),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등 9개국을 ‘최악 중 최악’ 국가로 꼽았음.
- 보고서는 전 세계국가를 ‘자유국(Free)’,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 ‘자유가 없는 국가(Not Free)’로 구분함. 이 가운데 ‘자유가 없는 국가’ 47개국 가운데서도 최하 점수를 받은 북한 등 9개국을 인권과 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함.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면에서 최하 점수인 7점을 각각 받았음.

● 北, 노동정량법·농장법 등 7개 법률 제정(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노동정량법 등 7개 법률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인용해 전함.
-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은 노동정량법 외에 농장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임.
- 중앙통신은 “노동정량법에는 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고, 농장법에는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중앙통신은 또 “수출품원산지법에는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가, 자연보호구법에는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관리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가,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에는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 이용, 버림물(오수)의 처리에서 나서는 질서상의 문제들이, 선원법에는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 심사에서 나서는 원칙들이 각각 규제되어 있다”고 설명함.
- 통신은 이번 법 제정 의미에 대해 “농장사업을 개선하고 노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고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면서 “또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며, 선원대열을 튼튼히 꾸려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됐다”고 덧붙임.

● 北과학자 2명, 네덜란드서 농업박사 과정(1/15, RFA)

- 북한의 농업과학자 2명이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에서 감자 재배를 전공으로 농업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 이 대학 국제식물연구소의 마텐 용스마 박사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농업과학원의 30대 과학자 두 명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다”며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감자 신품종 개발을 위해 장기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인데 북한 과학자들이 정규 박사 과정을 밟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힘.
- 용스마 박사는 이어 “필요한 비용은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데 향후 3년간 미화 56만 달러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됐다”며 “처음 1년은 네덜란드에 머물며 기본적인 박사수업을 받고, 그 후로는 북한의 토양과 환경에 맞고 병충해에도 강한 감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공동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그는 또 “바게닝겐 대학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감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며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네덜란드 농림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으로 기술교육, 단기 연수 등의 상호 교류가 이뤄졌다”고 소개함.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美, 北 6자 복귀·비핵화 조치 이행이 먼저(1/12, 연합뉴스)

- 미국은 11일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해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합의 이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힘.



- 필립 크롤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해 6자회담에 북한이 먼저 복귀하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할 때에만 평화협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함.
- 크롤리 대변인은 또 대북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의 사실상의 조건으로 내건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 대가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함.
- 그는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예스’라고 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러고 나면 우리는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 中언론, 6자회담 판도변화에 주목(1/12, 연합뉴스)

- 중국 언론들은 북한이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협정 회담을 공식 제의했고 미국이 이를 일축한 사실을 보도하며 6자 회담의 재개 여부와 판도변화에 큰 관심을 보임.
- 신화 통신은 11일 북한 외무성이 6자회담 틀 내에서 유관 당사국들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토론했다고 밝혔다고 속보로 전하고 종합 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12일 미국이 북한의 제의는 ‘선(先)비핵화 후(後)평화협정’ 입장에 어긋난다며 거절했다고 보도함.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6자회담 재개 여부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제의는 6자회담의 초점을 북핵폐기에서 평화협정으로 옮겨가려는 의도라는 한국 측 입장과 미국, 일본, 러시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전함.
- 인민일보의 보도에는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선의의 신호를 보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감지됨.
- 한편, 북한의 이번 제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류우익 신임 주중 한국대사에게 “북핵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과 때를 같이 해 베이징 외교가에서 주목을 받음.

#### ● 中, 6자 조속재개 촉구..공동노력 강조(1/12, 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한 채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힘.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와 관련, “우리는 각 당사국의 공동 노력으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원하며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각국과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함.
- 장 대변인은 “6자회담의 진전을 추진하고 9.19 공동성명에 규정된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들의 공통된 기대”라고 말하면서도 평화협정 회담에 한국이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



-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각국의 공통된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현정세 하에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공동노력으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란 목표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 北 유엔대사 “제재 풀리면 회담 복귀”(1/13, 연합뉴스)

-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12일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만 6자회담과 평화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신 대사는 이날 AP, DPA 통신 등 일부 외신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제재는 북미 간 불신의 상징”이라면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고 이들 외신은 전함.
- 특히 신 대사는 전날 북한 외무성이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 협정을 위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힘.
- 신 대사는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바 있음. 이들 국가는 모두 6자 회담 참여국들임.
- 신 대사는 미국이 평양의 최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 측이 대화를 위해 자리에 앉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우리는 제재가 풀리면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며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회담은 모든 제재 조치들이 우선 종식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함.
- 북한 외무성 성명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강조했을 뿐 미국의 대북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었음.
- 그는 특히 “평화 협정은 올해 체결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DPA 통신은 전함.

#### ● 조선신보, 평화협정·핵·6자 ‘합리적 연계’ 주장(1/14, 조선신보)

-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최근의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 “전쟁 구도의 해소와 비핵화 실천, 6자회담 재개를 합리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주동적인 제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19공동성명의 첫 머리에 명시된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서로의 견해를 능히 일치시킬 수 있다”고 밝혀 6자회



담 재개와 평화체제 및 비핵화 논의를 연계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함.

- 조선신보는 이어 “미국은 오늘도 조선(북)의 적대적 교전일방이고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으며, 위성 발사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 미국이 주도한 2009년의 제재가 그에 대한 증명자료”라며 “조미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재개돼도 다시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선은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
- 조선신보는 또 지난 12일 나온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해 “사태 진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김 대사는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회담은 6자회담 내에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열릴 수 있으며, 우리는 미국에 평화회담 형식에 대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신문은 아울러 “조선은 가능한 한 짧은 수순으로 비핵화 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 세우려고 하고 있다”면서 “작년 12월 조미회담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제재는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전쟁에 대비하면서 비핵화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나. 북·미 관계

- **美정부문서, ‘한국전 참전’ 관련 닉슨 인식 드러내(1/11, 연합뉴스)**
  -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자체보다는 일본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연합뉴스가 10일 입수한 미국 행정부의 기밀 해제된 자료에 따르면 닉슨 전 대통령은 40년 전인 지난 1970년 9월 1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주 등지의 지역 언론인 60명에게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행한 연설에서 이런 인식의 일단을 드러냄.
  - 자료에 따르면 닉슨은 당시 연설에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결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나는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참전해야 한다’는 세계 공산주의운동 전문가(휘태커 체임버)의 분석이 가슴에 와 닿았다”면서 “(한국전쟁의 성격은) 정말 그랬다”고 동의를 표시했음.
  - 이어 닉슨은 “(한국전쟁 발발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되돌아볼 때 만일 한국이 무너졌다면, 당시 일본은 비록 미국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의존도와 미국의 대일 방위보장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경도된 아주 강력한 사회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산



주의) 궤도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공산화 문제와 관련된) 존재였다”고 말함.

- 오바마 대북 친서, ‘관계개선 검토’ 내용(1/12, 요미우리신문)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게 보낸 친서는 북한이 북핵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면 미국은 관계개선과 무역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함.
  - 친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지참, 북한 관리와 회담하면서 전달
  -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친서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2005년 6자회담 참가국간 합의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의 경제협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친서에서는 이 성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 모두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美에 평화회담 형식 결정 요청(1/13, 연합뉴스; 1/16 민주조선)
  -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지든, 별개로 진행되든 형식은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힘.
  -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12일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회담은 6자회담 내에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열릴 수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 평화회담 형식에 대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 김 대사는 또 “남한 당국이 평화협정 회담을 여는 것에 동의할지 모르겠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평화회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북·미 간 추가 고위급 대화 추진 의사를 시사
  - 김 대사는 이어 “6자 회담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풀리면 내일이라도 재개될 수 있다”면서 6자회담 선결 조건은 대북 제재 해제는 북측 주장을 되풀이함.
  - 앞서 북한은 11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화되려면 북·미 간 신뢰가 조성돼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평화협정부터 체결돼야 한다”며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했음.
  - 민주조선은 16일 북한과 미국 간 신뢰관계 조성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대안은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신문은 이날 ‘조미(북미)관계의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때가 됐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조미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신뢰조성에서 근본적 혁신이 일어난다”며 “지금은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으로써 조미 적대관계 청산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해



야 할 때”라고 주장

### ● 오바마, 北 핵의무준수해야 관계개선(1/1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만 관계개선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2일 밝힘.
- 벤 로즈 백악관 안보담당 부 보좌관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평가하는 기고문에서 북한 및 이란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한 선택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며 “의무를 준수하면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의 문이 열려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고립될 것”이라고 말함.
- 로즈 부 부좌관은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 왔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지적, 핵확산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확고함을 강조
- 그는 또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는 이란에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데 어느 때보다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란은 더 고립돼 있다고 덧붙임.

### ● 北, 미국인 여행제한 해제 검토(1/13, VOA)

- 북한 당국이 그동안 미국인들의 평양 여행시 엄격히 적용했던 방문 시점과 체류기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전함.
-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북한전문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는 이 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지난주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로부터 미국인들에게 연중 아무 때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그동안 유럽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연중 아무 때나 방북해 최장 보름간 체류하도록 하면서, 미국 국적 관광객에게는 8~10월의 ‘아리랑’ 집단체조 공연 기간에 한해 최장 4박5일의 방문만 허용해 왔음.
- 키츠 대표는 “북한 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은 미국인들이 연중 아무 때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류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면서 “최근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 조짐이 태도 변화의 요인인 것 같다”고 말함.
- 그는 이어 관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열차로 중국에서 북한까지 들어가도록 허용해줄 것을 북한 측에 요청한 상태인데 이달 안에 북한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임.
- 그는 또 미국인에 대한 여행제한이 풀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행사가 열리는 2월 관광이나 국제 아이스스케이팅 대회 관람, 백



두산 관광 등 새로운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음.

#### ● 美, 北 핵포기 않으면 안보조치 강화지속(1/14, 연합뉴스)

- 윌리스 그렉슨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강화된 안보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힘.
- 그렉슨 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적극적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우리는 중국이 6자회담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고무돼 있으며, 중국이 이런 해법(안보리 결의 이행)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함.
- 그는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과의 긍정적 협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도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
-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몇몇 긍정적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임.
- 데이비드 셔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문제는 중국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함.
- 셔 부차관보는 “우리의 목표로 남아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지혜로움을 북한에게 확신시키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유엔 결의 1874호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지지는 필수적”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임.
- 그는 “우리 두 국가(미국, 중국)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에 나서도록 중국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다. 북·중 관계

##### ● 주중 북한대사, 평화협정 당사자 美·中 거론(1/12, 교도통신)

-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12일 북한 외무성의 전날 평화협정 회담 제안과 관련, 회담에 참여할 정전협정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그는 특히 한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휴전협정에 반대







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힘.

- 외무성 성명은 “위임에 따라” 이같이 제의했다고 밝혀,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함.
-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짐.
- 성명은 또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결되었어야 했고, 조선반도에 일찍이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었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평화협정을 뒤로 놓고 핵문제를 먼저 논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 성명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힘.
- 성명은 특히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 ● 애슈턴, 對北정책, 아직 신중히 검토 안 해(1/12, 연합뉴스)

- 향후 5년 간 유럽연합(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할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이하 외교대표)가 북한 관련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 아님을 밝힘.
- 애슈턴 대표는 현 시점에서 EU의 대(對) 북한 정책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여 미국의 대북(對北) 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수동적 자세를 드러냄.
- EU는 지난달 12월22일 열린 환경장관회의(환경이사회)에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북한 정권 실세를 대거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음.



### 3. 대남정세

- 두만강 월북 한국인 정신질환전력 40대(1/11, 연합뉴스)
  - 지난 8일 중국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에서 두만강을 건너 월북한 한국인은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40대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월북한 한국인은 40대의 권모 씨로 확인됐다”고 전함.
  - 그는 “권씨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전력이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북한에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임.
  - 권씨는 지난 8일 오후 옌지(延吉)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투먼에서 훈춘(琿春) 방면으로 2km 달리다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강물이 언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갔음.
  
- 北, 南에 대북전단 살포자 처벌 요구(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3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에 주동자 처벌을 요구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전화통지문을 보내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이 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반공 광증에 들며 수십만 장의 뼈라를 우리 측으로 날려 보내는 난동을 부렸다”면서 “남측 당국은 반공화국 뼈라살포 난동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행위이고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대역죄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 극우보수단체들을 즉시 해산하고 주범들을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지문은 또 “우리 군대는 북남관계 개선이 아무리 소중하고 절실하다 해도 우리 수뇌부의 절대적 권위와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앞에서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면서도 뒤에서는 북남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남측 당국의 도발적인 뼈라 살포행위에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임.
  
- 北, 26~27일 금강산·개성관광 접촉 제안(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4일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안함.
  - 북한 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이 1년 6개월이 나 중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6일과 27일 금강산에서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을 갖자”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귀를 촉구했음.

- 조선신보는 이어 “미국은 오늘도 조선(북)의 적대적 교전일방이고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으며, 위성 발사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 미국이 주도한 2009년의 제재가 그에 대한 증명자료”라며 “조미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재개돼도 다시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선은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또 지난 12일 나온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해 “사태 진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김 대사는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회담은 6자회담 내에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열릴 수 있으며, 우리는 미국에 평화회담 형식에 대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 신문은 아울러 “조선은 가능한 한 짧은 수순으로 비핵화 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 세우려고 하고 있다”면서 “작년 12월 조미회담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제재는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전쟁에 대비하면서 비핵화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 北 유엔대사 “제재 풀리면 회담 복귀”(1/13)

-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12일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만 6자회담과 평화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사는 이날 AP, DPA 통신 등 일부 외신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제재는 북미 간 불신의 상징”이라면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고 이들 외신은 전했다. 특히 신 대사는 전날 북한 외무성이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 협정을 위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대사는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바 있음. 이들 국가는 모두 6자 회담 참여국들임. 신 대사는 미국이 평양의 최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 측이 대화를 위해 자리에 앉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가 풀리면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며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회담은 모든 제재 조치들이 우선 종식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성명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음. 그는 특히 “평화 협정은 올해 체결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DPA 통신은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결의 채택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했음.



### ● 美 “北 6자 복귀·비핵화조치 이행이 먼저”(1/12)

- 미국은 11일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해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합의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예스라고 답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다음에 광범위한 다른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해 왔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우리에게 와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9.19) 공동성명 하의 의무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그러면 다른 종류의 논의들도 우리는 정말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9.19공동성명 비핵화 조치 이행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북한 앞에 놓인 문제는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고 예스라고 답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우리는 핵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9.19)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관계정상화 및 경제, 에너지 지원과 같은 많은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그들(북한)이 6자회담 내로 돌아오고, 그들의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다른 광범위한 가능한 논의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평화협정 회담과 관련, “미래의 (평화협정)협상에 우리가 유일한 당사국은 아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포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의 사실상의 조건처럼 언급한데 대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 그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추가적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여전히 있느냐’는 질문에 “이 시점에서 예상은 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이루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밖에 그는 방한 중인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북한 인권문제가 6자회담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언급과 관련, 6자회담 재개시 북한 인권문제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면서 “명백히 인권문제는 우리가 장래에 북한과 가질 어떤 논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북한이 우리가 말한 조치를 취해서 미국과 진지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대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계속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웃 국가든 미국이든 간에 가지게 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인권은 중요한 의제의 부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 中, 6자 조속재개 촉구..공동노력 강조(1/12)

- 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한 채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와 관련, “우리는 각 당사국의 공동 노력으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원하며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각국과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6자회담의 진전을 추진하고 9.19 공동성명에 규정된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들의 공통된 기대”라고 말하면서도 평화협정 회담에 한국이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각국의 공통된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현 정세 하에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공동노력으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란 목표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북한 외무성은 앞서 11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발표 다음날인 12일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는 일본 교도통신 등과의 회견에서 회담에 참여할 정전협정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 <中언론, 6자회담 판도변화에 주목>(1/12)

- 중국 언론들은 북한이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협정 회담을 공식 제의했고 미국이 이를 일축한 사실을 보도하며 6자 회담의 재개여부와 판도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신화 통신은 11일 북한 외무성이 6자회담 틀 내에서 유관 당사국들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토론했다고 보도하고 속보로 전하고 종합 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12일 미국이 북한의 제의는 ‘선(先)비핵화 후(後)평화협정’ 입장에 어긋난다며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신화통신 기사를 중심으로 사실 보도에 치중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가 임박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6자회담 재개 여부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제의는 6자회담의 초점을 북핵폐기에서 평화협정으로 옮겨가려는 의도라는 한국 측 입장과 미국, 일본, 러시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인민일보의 보도에는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선의의 신호를 보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 한편, 북한의 이번 제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류우익 신임 주중 한국대사에게 “북핵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과 때를 같이



해 베이징 외교가에서 주목을 받았음. 베이징 외교가에는 6자회담이 오는 4월께 재개될 것이며 북한과 중국 간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막 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음.

#### ● 北, 정전협정당사국 평화협정회담 제의(1/12)

- 북한 외무성은 11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음. 외무성 성명은 “위임에 따라” 이같이 제의했다고 밝혀,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했음.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음.
- 성명은 또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결 되었어야 했고, 조선반도에 일찍이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었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평화협정을 뒤로 놓고 핵문제를 먼저 논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음. 성명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됨. 성명은 특히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북한이 지난해 4월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계해 언급한 것은 처음임.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음.

#### 나. 미·북 관계

##### ● “北, 김정일 생일에 미국인 방북 허가”<RFA>(1/16)

- 오는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미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이 처음으로 허용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했다. 이 방송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북한전문 ‘아시아태평양 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의 말을 인용, “미국인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생일 축제 기간인 2월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유럽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연중 아무 때나 방북해 최장 보름간 체류하도록 하면서, 미국 국적 관광객에게는 8~10월의 ‘아리랑’ 집단체조 공연 기간에





한해 최장 4박5일의 방문만 허용해왔음. 이 방송은 “북한이 오는 4월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도 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가 풀리면 미국인 관광객은 연중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체류기간도 최대 10일까지 늘어나며 중국에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 北신문, 평화협정 체결 거둬 촉구(1/16)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6일 북한과 미국 간 신뢰관계 조성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대안은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거둬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신문은 이날 ‘조미(북미)관계의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때가 됐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조미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신뢰조성에서 근본적 혁신이 일어난다”며 “지금은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댄으로써 조미 적대관계 청산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 회담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한 것과 관련,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여러 기존 합의문이 빛을 보지 못하고 6자회담이 공전하고 있는 것은 북·미간 신뢰부족 때문이라며 “신뢰관계가 조성돼야 호상(상호) 관계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美 “北 핵포기 않으면 안보조치 강화지속”(1/14)

- 윌리스 그렉슨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강화된 안보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렉슨 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적극적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6자회담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고무돼 있으며, 중국이 이런 해법(안보리 결의 이행)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과의 긍정적 협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도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몇몇 긍정적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문제는 중국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서 부차관보는 “우리의 목표로 남아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지혜로움을 북한에게 확신시키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



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 결의 1874호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지지는 필수적”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 방지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두 국가(미국, 중국)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에 나서도록 중국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보즈워스 “수주내 외교적 프로세스 재개 희망”(1/14)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앞으로 수 주 또는 수개월 내에 (북핵과 관련한) 외교적 프로세스로 되돌아가서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의 윌러드 호텔에서 KEI(한미 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초청연사로 나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런 발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단 희망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첫 북·미 대화 이후 그가 6자회담 재개 희망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임. 또 그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그런 요구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을 이뤘을 때 제재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자신과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북이 “생산적이고, 유용했으나 언제, 어떻게 6자회담 프로세스를 재개할 것인지 예는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당면한 목표이며, 이를 가급적 조속히 이루기 위해 북한은 물론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보즈워스 대사는 북·미간에 추가적인 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6자회담 틀 내에서 의제화 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과거 20여년 동안)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은 시기에는 북한이 무책임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주목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 문제에 관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문제는 진정으로 다자적인 문제로, 단지 북한의 핵 야망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포함해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 ● “오바마, 北 핵의무준수해야 관계개선”(1/1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만 관계개선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2일 밝혔음. 벤 로즈 백악관 안보담당 부 보좌관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평가하는 기고문에서 북한 및 이란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한 선택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며 “의무를 준수하면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의 문이 열려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 로즈 부 보좌관은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 왔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지적, 핵확산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확고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는 이란에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데 어느 때보다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란은 더 고립돼 있다고 덧붙였다. 로즈 부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년간 확고한 외교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국을 더 강력하게 하고 특히 도덕적인 권위를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 그는 “국제경제는 대재앙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책임을 완수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이라크, 아프간, 파키스탄 전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1년 전에 비해 훨씬 강화됐다는 것임. 로즈 부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고문을 금지하고 관타나모 미군 수용소 폐쇄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여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되살림으로써 알카에다가 미국의 인권침해 논란을 조직원 충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로즈 부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중동평화협상 등 성과가 충분하게 나오지 못한 분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 “北, 美에 평화회담 형식 결정 요청”(1/13)

-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지든, 별개로 진행되든 형식은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12일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회담은 6자회담 내에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열릴 수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 평화회담 형식에 대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달 평양에서 열린 북·미 양자회담에서 평화협정 회담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당시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6자 회담 재개 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별도 가동해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





알려졌다며 따라서 북한이 이 친서를 보고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받아들일 것이란 심증을 굳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 <美 “北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1/12)

- 미국이 11일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이행이 먼저”라고 밝힌 것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페이스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임. 특히 미국이 9.19 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가 이행돼야 평화협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6자회담 복귀뿐만 아니라 선(先) 비핵화 조치 이행이 평화협정 회담의 전제조건임을 확인하는 것임. 결국 북한이 이번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을 뒤로 놓고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핵문제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향후 북핵 논의의 난항을 예고함.
-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논의라기보다는 시차를 둔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협정 논의에 가까움. 이는 6자회담 복귀와 동시에 평화협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임.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뒤 평화협정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단지 복귀만 하는 것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비핵화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달 방북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북미 양측의 이날 공개적 입장 교환은 향후 미·북 양자는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 간의 줄다리기가 복잡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함.
- 미국은 이날 북한의 제안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음.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달 북측이 말한 것과 매우 일관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 당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6자회담의 맥락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지만, 다른 일들(비핵화 조치들)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에는 북측과 양자회담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비핵화 논의와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데 대해 “북한이 일의 순서를 돌리고 변화를 하고 있다”고 북측 의도를 분석하면서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예스라고 답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다. 중·북 관계

### ● 고위당국자 “中도 대북제재 유지 입장”(1/17)

-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대북 제재해제 문제와 관련, “6자회담 복귀만으로 대북제재 해제는 어렵다는 게 5자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를 받은 것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라며 “제재를 가한 근본적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6자회담에 돌아온다고 해서 제재를 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음. 그는 이어 “유엔 결의안을 보면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6자회담이 끝났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고 대화테이블에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그는 특히 “중국도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북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 당국자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관련, “북한이 무기수출로 한해 벌어들이는 돈이 약 2~3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대부분 밀매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지만 계속 무기거래가 차단당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설과 관련, “연초에 중국이 단둥지역에서 비상 경계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이유가 확인됐다”며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지금 당장 방중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 中, 나진항 이어 청진항 진출 본격화(1/17)

- 중국이 나진항 부두 사용권 확보에 이어 청진항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북한을 통한 동해 루트 다각화와 대북 교역 확대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대북 소식통은 17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는 노후한 투먼-청진항 구간 철도를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면서 “투먼시가 170km에 이르는 이 철도 보수를 위해 북한 측에 1천만 달러를 장기 차관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는 4월부터 보수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정부도 지난 14일 열린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 전망 계획 지도소조’ 제1차 회의에서 투먼-청진항 철도 보수 계획을 공개했다고 연변 소식통들이 전했다.
-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이 지난해 10월 훈춘-나진 구간



도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나진항 1호 부두 전용권을 확보한 데 이어 지린(吉林)성도 지난해 11월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보세, 가공 수출이 가능한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 개발기로 북한과 합의함으로써 중국의 나진항 진출은 이미 가시화됐지만 청진항 진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지린성은 지난해 10월 한장푸(韓長賦) 당시 성장(省長)을 대표로 하는 지린성 정부 대표단이 함경북도를 방문, 나진항과 청진항 공동 개발 방안을 협의,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이후 청진항 진출이 확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중국은 2005년에도 투먼-청진항 철도 보수를 추진했으나 북한과 이해가 엇갈려 무산됐음. 한 대북 소식통은 “투먼-청진항 철도를 보수하겠다는 것은 이미 북한으로부터 청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나진항 1호 부두 전용권 획득에 이어 청진항까지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동해 진출이 한결 용이하게 됐다”고 평가했음.

-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북중 통로 정비도 서두르고 있음. 연변주 정부는 창지투 전망 계획 지도소조 1차 회의에서 취안허(圈河) 통상구와 투먼 통상구, 산허(三合) 통상구 등 3개의 대북 통상구 다리를 올해 보수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밝혔음. 이들 다리는 두만강에 세워진 훈춘과 나진항, 투먼과 청진항을 잇는 대북 통로임. 연변주는 또 옌지(延吉)-블라디보스토크 항로 개설, 투먼-하싼 철도 노선 재개 등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역 확대도 꾀하기로 했음.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11월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 개방 선도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승인한 이후 중국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를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였음.

### ● 中훈춘, 탈북자 단속 ‘국경순찰대’ 결성(1/15)

- 북한 접경 지역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반스(板石)진 농민들이 국경순찰대를 결성, 북중 국경 경비에 나섰다. 반스진 농민 15명이 지방 정부와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국경순찰대를 조직, 지난 10일부터 북중 국경 경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훈춘은 북한과의 국경선이 5.4km에 이르는 데다 두만강 상류 지역은 개울만 건너면 국경을 넘을 수 있어 북한 주민들의 주요 탈북 루트로 이용돼왔음. 탈북이 아니더라도 식량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 농가에 침입, 먹을거리나 옷가지를 훔쳐가는 사례도 빈번함. 반스진 관계자는 “불법 월경자들이 자주 출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치안 강화를 위해 자체 순찰대를 조직했다”고 말했음.

### ● “김정일 1월 방중 어렵다”(1/1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월 방중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이달 내 방중이 사실상 어렵다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 포착



됐음. 김 위원장의 방중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부장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6개국 순방에 나서는 것임.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이 당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콩고민주공화국(DRC), 말리, 세네갈, 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지부티 등 아프리카 6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 북한 내각에서 공식 직함이 없는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방중해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실무준비와 수행 등은 각국 정당 간 외교를 책임진 대외연락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짐. 따라서 대외연락부의 수장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15일부터 26일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북수의 베이징 소식통들은 14일 분석했음. 2006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시 왕 부장은 북중 국경도시인 단둥(丹東)으로 영접 나가 열차 내에서 벌어진 환영행사에 참석했으며 이후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전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왕 부장은 지난해 1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 김 위원장의 외명설 이후 첫 외빈으로서 그와 접견하는 등 김 위원장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식통들은 “15일부터 26일까지는 방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26일 이후에도 대외연락부의 실무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1월 중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관측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연초부터 일본과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1월 중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것 이란 소문이 계속 확산돼 왔음. 단둥에 특별 경계가 펼쳐지고 있다거나 북한 선발대가 중국에 도착했다는 등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설들이 잇따르면서 일본과 한국 언론들은 단둥에 취재단을 파견하는 등 촉각을 세웠음. 그러나 방중설의 원인이 된 각종 근거들은 현지 취재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14일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음.
- 중국 외교부도 계속 부인하고 있음.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설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 일부 기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현재까지 그런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음. 장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며 부인한 것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번이 4번째임. 그룹에도 중국에서는 김 위원장이 오는 16일 베이징에 도착하고 17일 상하이(上海)시를 방문한다는 등의 새로운 설들이 부각되는 등 방중설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 주중 北대사, 평화협정 당사자 美·中 거론(1/12)

-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12일 북한 외무성의 전날 평화협정 회담 제안과 관련, 회담에 참여할 정전협정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특히 한국의 참





여에 대해서는 “휴전협정에 반대해 조인하지 않고 현재도 (한국이 협정에) 반대하는지 어떤지 알지 못 한다”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음. 최 대사는 이날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교도통신, 로이터 통신 등과 가진 이례적인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 제재가 해제되고 평화협정 회담 제안이 수락되면 곧바로 라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곧바로 라도”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음. 최 대사는 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북한과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핵 문제의 기본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미 양자 대화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음. 그는 이날 회견 시작에 앞서 북한 외무성이 전날 발표한 성명을 낭독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가능성 등 성명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음.

#### ● 北·中 민간교역, 화폐개혁 이후 ‘울스톱’(1/12)

- 북한의 화폐개혁 단행 이후 북·중 간 민간 교역이 사실상 울스톱 됐음. 12일 중국 단둥(丹東)과 연변(延邊)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1일 북한이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여간 북한과의 민간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 대북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단둥에서는 최근 북한을 오가는 화물 차량이 하루 3-4대에 그치고 있음. 화폐 개혁 이전 수십 대에서 많을 때는 100여 대의 차량이 운행됐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준 것임.
- 대북 무역상들은 “북한의 새해 예산이 3월부터 본격 집행되기 때문에 매년 1, 2월이 북중 교역의 비수기이긴 하지만 민간 교역이 완전히 끊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음.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은 “북한 측에 농산물을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보름째 보내지 않고 있다”며 “나중어야 화폐 개혁 여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음. 그는 “화폐 개혁 이후 하루가 다르게 환율과 물가가 뛰기 때문에 북한 파트너가 물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화폐 개혁 이후 북한 당국의 무역 통제가 심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북 무역상은 “단둥 세관이 이달 초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말고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을 오가는 화물 운송 차량은 하루 5대를 넘지 않는다”며 “북한의 긴급한 관급 물품 이외에는 북으로 들어가는 물품이나 나오는 물품이 전혀 없다”고 말했음. 단둥과 함께 중국의 대북 무역 창구인 연변도 사정은 비슷함. 한 중국 무역상은 “화폐 개혁 이후 북한 당국이 변경 보따리 무역을 엄격하게 단속, 쌀 등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중국산 물품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며 “이달 초 중국산 물품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려던 한 무역상은 북한 세관의 제지로 물품을 반송한 채 빈



몸뚱이로 들어갔다”고 귀띔했음. 북한 나진에 거주하며 화폐 개혁 전 친척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옌벤에 왔다는 한 북한 주민은 “북중 무역 중단으로 회령과 나진을 오가던 화물 운송 차량 운행마저 끊겼다”며 “화물 차량 말고는 회령에서 나진을 가는 교통수단이 없어 돌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음.

- 대북 무역상들은 그러나 북중 간 민간 교역 중단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음. 한 대북 무역상은 “중국과의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한으로서는 민간 교역을 오랫동안 통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부터 무역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음. 또 다른 대북 무역상은 “화폐 개혁의 목적이 부를 쌓은 상인들을 제압하려는 것인 만큼 북한 당국이 당분간 장사와 무역을 막겠지만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제 구조상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장마당도 6개월만 지나면 화폐 개혁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라. 일·북 관계

##### ● 日외상 “北제안, 핵문제 연기공작 가능성”(1/13)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13일 북한 외무성의 지난 11일 평화협정 협상 제안과 관련, “(핵 문제의) 연기 공작의 구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오카다 외상은 하와이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음. 이는 북한의 의도를 견제하고 미국 측에도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도 공감을 표시하는 등 두 사람은 북핵 6자회담 조기 재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 두 사람은 또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이 되는 이달 19일 양국 외교, 국방 장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안보조약이 해 온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동맹을 심화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양국 간 동맹 강화 회담을 조속히 열고 올 상반기 중 양국 외교·국방 담당 장관이 참가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음.
-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날 오전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간부 모임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미 동맹, 일·미 안보조약이 존재하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일·미 동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긴급하며 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말했음.



## 마. 기타

### ● “정부, PSI 물적지원 계획 당분간 없어”(1/17)

- 우리 정부가 작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정식 참여를 선언했지만 역내·외 차단 훈련에 필요한 물적 지원은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우리 정부가 PSI 정식참여를 선언했지만 해상차단훈련에 필요한 함정과 항공기 등 물적 지원은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 훈련에도 인적인 참가 외의 물적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함으로써 WMD의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로, 정부는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 참여하다 국제사회의 WMD 차단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공식참여를 선언했음. 하지만 정부는 PSI 정식참여를 선언한 이래 처음 참가한 작년 10월의 싱가포르 해상차단훈련에 물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역시 이 방침을 유지키로 했음. 물적 지원은 정식참여와 함께 PSI 8개항 중 주요 항목으로 물적 지원에 대한 동참이 PSI의 전면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처럼 정부가 물적 지원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PSI의 주요 대상이 북한인만큼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상차단훈련에 필요한 물적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올해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남북관계를 고려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식참여를 선언해 국제사회의 반테러 노력에 공식적으로 동참한 만큼 물적 지원 문제는 주변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음.
- 정부는 작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상차단훈련에 외교부, 국방부, 해경, 관세청 등에서 8명을 파견해 도상훈련, 해상차단훈련, 옵서버 프로그램에 참가했음. 특히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와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실제 해상차단훈련에 해양경찰청 요원 1명이 참여했음. 당시 해상차단훈련은 WMD 적재 의심선박 3척에 대한 항공정찰과 통신검색, 차단기동, 승선, 검색, 항구검색 순으로 진행됐는데 해경청 요원은 미국 승선팀에 합류해 작전 전반을 근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 군사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PSI 정식참여를 선언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항공기 등 물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운용전문가그룹 등에 참여할 경우 해상차단훈련에 1명이 아닌 승선팀을 보내고 이어 항공기와 함정 등을 파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월께 호주에서 열리는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할 예정임.



### ● “北과학자 2명, 네덜란드서 농업박사 과정” <RFA>(1/15)

- 북한의 농업과학자 2명이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에서 감자 재배를 전공으로 농업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했다. 이 대학 국제식물연구소의 마텐 용스마 박사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농업과학원의 30대 과학자 두 명이 대학에서 진행되는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다”며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감자 신품종 개발을 위해 장기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인데 북한 과학자들이 정규 박사과정을 밟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용스마 박사는 이어 “필요한 비용은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데 향후 3년간 미화 56만 달러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됐다”며 “처음 1년은 네덜란드에 머물며 기본적인 박사수업을 받고, 그 후로는 북한의 토양과 환경에 맞고 병충해에도 강한 감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공동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바게닝겐 대학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감자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며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네덜란드 농림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으로 기술 교육, 단기 연수 등의 상호 교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 ● 北, 당국제부장에 김영일 외무성부상 임명(1/14)

- 공석이던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에 외무성의 중국 담당 김영일 부상이 임명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국제부가 주북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신년 연회를 개최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 언론이 언급한 국제부장이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김 부상의 국제부장 승진을 확인했다. 당 국제부장은 김양건 현 국방위원회 참사 겸 당 통일전선부(통전부)장이 2007년 초 통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최근까지 줄곧 공석으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언론이 작년 12월22일 주북 캄보디아 대사관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그를 외무성 부상으로 지칭한 점으로 미뤄 이번 승진 인사는 연말 또는 연초에 이뤄진 것으로 보임. 김 부상이 당 국제부장에 임명된 데는 ‘중국통’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됨.
- 북한 외교는 외무성이 전담하고 있지만 대중국 외교의 중심은 당 국제부임.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문제는 전적으로 당 국제부 소관으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협의해 이뤄지며, 반대로 중국 국가주석 등 수뇌부의 방북도 마찬가지임. 김 신임 국제부장은 작년 3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일 총리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고, 9월에는 대표단을 인솔하고 중국을 다녀왔음. 또 작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의 방북 때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



답에 배석한 것을 비롯해 방북한 중국 인사들을 밀착 수행해왔음. 김신임 국제부장은 1945년생으로 평양외국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했으며 1975년 당 국제부 지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외교부(현 외무성) 부부장, 리비아와 튀니지 대사를 지내는 등 외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임. 초기 경력에서 보듯이 원래 ‘아프리카통’이었으나 2000년께 외무성 중국 및 아시아 담당 부상으로 임명되고 2003년 베이징 북핵 6자회담 1차 회의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후 ‘중국통’으로 분류됨.

### ● 클린턴 “오바마 외교 1년 아태지역 중시”(1/13)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첫째 외교 초점이 어느 때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맞춰졌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은 자신이 역대 국무장관들과 달리 첫 순방대상국을 유럽이 아닌 아시아를 선택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의 안보와 경제를 균건히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지역포럼 등을 통해 핵확산과 식량안보, 기후변화라는 긴급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대북제재를 강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87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 이는 평화와 안보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업신여기는 이들에 대해 현실적인 응분의 대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 ● “北 연말 국경봉쇄 ‘끝’..외국인관광 허용”<RFA>(1/13)

- 작년 11월 하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중국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매년 그랬듯이 북한 당국은 작년 11월20일부터 국경지방을 봉쇄해 북한 관광이 중단됐다”면서 “이달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다시 허용한다고 해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 같다”면서 “라진과 선봉, 백두산 등을 둘러보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월드비전, 北에서 바이오연료 사업 계획”<RFA>(1/13)

- 국제 민간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북한에서 바이오연료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월드비전의 빅터 슈 북한담당 과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분이나 동물 배설물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취사연료와 전기를 공급하는 바이오연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 국장은 이어 “바이오연료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나무 땔감이나 석탄의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해 현재 (북한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2년간 약 35만 달러를 들여 함경북도의 칠봉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식수 개선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우물의 깊이나 새로운 우물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하기 위해 미국의 전문 기술자가 3월 중순이나 늦어도 4월 말 이전에 현지를 방문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北, 인권 ‘최악 중 최악’ 그룹”(1/13)

- 북한이 지난해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측면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Worst)’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2일 전 세계 194개국과 14개 자치령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보장 수준을 분석한 2010년 보고서에서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버마(미얀마),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등 9개국을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는 전 세계국가를 ‘자유국(Free)’,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 ‘자유가 없는 국가(Not Free)’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자유가 없는 국가’ 47개국 가운데서도 최하 점수를 받은 북한 등 9개국을 인권과 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했다.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면에서 최하 점수인 7점을 각각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단일 정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에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 점을 들어 종전보다 점수를 깎았다.

### ● 애슈턴 “對北정책, 아직 신중히 검토 안 해”(종합)(1/12)

- 향후 5년 간 유럽연합(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할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이하 외교대표)가 북한 관련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 아님을 밝혔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EU의 외교정책 현실을 재확인시킨 발언으로 해석됨. 애슈턴 대표는 11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서 유럽의회 집행위원단 인사 청문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견해를 나타냈다. 애슈턴 대표는 현 시점에서 EU의 대(對) 북한 정책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여 미국의 대북(對北) 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수동적 자세를 드러냈다. EU는 지난달 12월22일 열린 환경장관회의(환경이사회)에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북한 정권 실세를 대거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음.





- 남북 관계와 관련, 유 장관은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협의 등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도 대화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남북 양측이 금강산과 개성관광 회담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남북 간 대화와 화해·협력력을 지지해왔으며 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한·중·일 정상회의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양 부장은 오는 4월30일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주기를 희망하고 한국 고위급 인사들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 양 부장은 “지난해 한·중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도 원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의사소통과 의견조율이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위급 교류가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양국 장관은 또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작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상설사무국’의 한국 유치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전향적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으며 양 부장은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협조의사를 표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 이번 회담에는 중국 측에서 추이텐카이(崔天凱) 주일 중국대사, 한국 측에서는 권철현 주일대사가 참석했다. 회담에 앞서 유명한 장관은 양 부장이 백호(白虎)띠인 점을 거론하며 “60년 만에 오는 상서로운 호랑이해로서 양 부장의 이름에 호랑이 호자가 들어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고 양 부장은 “양국관계가 호랑이와 용처럼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후진타오 “6자 정상회담 복귀 믿는다”(종합)(1/11)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신임장을 제정한 류우익 신임 주중 한국대사에게 “북핵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류우익 신임 주중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은 뒤 별도 환담을 갖고 “현재 북핵 정세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란 적극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유관 각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후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북핵 문제에서도 중·한 양국은 그동안 긴밀히 소





통하고 조율해 왔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의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후 주석은 “한국 정부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분이 부임한 만큼 중·한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류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베이징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신임장 제정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더라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직접적으로 “중국은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국과의 외교는 중국의 주변 국가와의 외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후 주석은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수교 이래 18년간 유례 없이 매우 빠르고 폭넓게 발전해 왔다”면서 “최근 고위급 인사의 왕래를 통해 정치적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와 무역관계에서도 중요한 동반자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 주석은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도 양국은 양호한 소통과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중·한 관계의 발전은 양국 간 실질적인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류 대사도 “한·중 양국은 모두 매우 중요한 국가로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재임기간 최선을 다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6자회담이 정체 상태에 있지만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서 회담을 재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한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이 잘 되는 게 한국에 도움이 되고 한국이 잘 되는 게 중국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 같은 믿음은 실제로 증명됐다”면서 “올해에도 활발한 정상외교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다. 한·일 관계

##### ● 한·일 “제재해제, 비핵화 진전 이후 가능”(종합)(1/16)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대신은 16일 오전 도쿄(東京)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북핵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적극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긴밀한 협의 하에 6자회담을 조기 재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17일 한·중, 일·중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6자회담의 장국인 중국의 회담 조기재개 결정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양국은 특히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고 외교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지속해내갈 수 있도록 양쪽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대화과 제재’의 투트랙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과 관련, 비핵화 논의가 진전된 이후에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유 장관은 “평화협정 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추동력을 얻은 이후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형식이 남·북이 됐건, 미·북이 됐건, 4자가 됐건 6자회담이 먼저 재개되고 비핵화의 추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카다 외무대신도 “비핵화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일괄타결(그랜드 바겐)안을 포함한 회담의제에 대해 관련국간 협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회동에서 유 장관은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거론하고 참정권 조기실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오카다 외무대신은 “일본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일 셔틀외교와 관련, 오카다 외무대신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했다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일본 측 희망을 잘 알고 있다”며 “내부에서 협의한 뒤 일본 측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양국은 한국이 올해 11월 서울에서 주최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일본이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 라. 한·러 관계

### ● 고위소식통 “러 제안, 그랜드바겐 논의 가능”(1/13)

-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13일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와 남·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과 전력망, 철도망 구축을 본격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현재 그랜드바겐(일괄타결)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6자회담이 열리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랜드바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가는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거론된 적이 있다”며 “러시아가 그 같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브누코프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남·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과 전력망, 철도망 구축 사업을 그랜드바겐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마. 미·중 관계

### ● “美, 對대만 무기판매 수개월내 발표”(1/14)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수개월 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의 저명한 중국-대만 문제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이 밝혔다고 대만 신문들이 14일 보도했음. 글레이저 연구원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양안 문제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국이 위협한다고 해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의 입장은 미국 정부가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무기 판매 발표 시기라면서 판매 발표 후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의 미국 답방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 그는 미 행정부가 F-16C/D 전투기를 대만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냐는 질문에 미 정부가 대만이 실제로 이 전투기들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대만과 상의 후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중국의 반대에도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음. 글레이저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취임 후 1년간 대만과의 무기 거래를 마무리 짓지 못 했다고 설명하고 중·미 관계가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對) 대만 무기 판매, 달라이 라마 미국 방문 같은 다른 의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미국은 2001년 4월, 2008년 10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방침을 발표하고 세부 내역들은 그 후 별도로 공개한 바 있음.

### ● 마잉주 “美, 對대만 무기판매 환영”(1/13)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미 언론의 최근 보도들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대만 신문들이 13일 보도했음. 마 총통은 총통부에서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서 브룩스 소장 등 일행 4명을 12일 접견한 자리에서 미 언론들이 최근 대만과 미국 간 무기 거래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우리는 이런 진전을 보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의 대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이 규정한 의무에 그치지 않고 대만 해협과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고 대만이 중국과의 화해 과정에서 더 자신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 총통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정책은 ‘대단히 필수적인 정책’이며 미 정부가 무기 판매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는 데 대해 대만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연일 반대하면서 급기야는 11일 미사일 요격 실험까지 단행한 가운데 나온 것임.



### ● 클린턴 “미중관계 성숙..탈선 없을 것”(1/1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제 등 판매 방침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관련, “내 생각으로는 우리 미국과 중국이 현재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이에 이견이 있어도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새해 첫 해외순방으로 파푸아 뉴기니, 뉴질랜드, 호주 방문 길에 오른 클린턴 장관은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모두 알다시피 중국은 21세기 신흥 강국”이라며 그런 만큼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에 전면 개입해 평화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이 대만에 미사일 요격체제와 미사일을 10억 달러 어치 팔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금까지 중국의 고위관계자 6명이 잇따라 미국을 공개 성토했으며 반발하고 있음.
- 클린턴 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면담할 경우 미중 간 알력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시인하고, 그러나 미국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되 “문화적 종교적 존중과 자치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열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를 출발한 클린턴 장관은 다음 기착지인 하와이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과 회담할 예정임. 클린턴 장관은 오카다 외상과 후텐마 주일 미 군비행장 이전문제보다 더 폭넓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며 이 회담이 “50년 된 동맹의 중추성을 재확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바. 기타

#### ● <로버트 킹-문타폰 서울서 ‘인권회동’>(1/14)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와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4일 오전 회동했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의 초청으로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조찬회동을 가진 것. 우리 정부에서는 조현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했음. 두 사람의 회동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직접 다루는 양대 주역들이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음. 킹 특사와 문타폰 보고관은 각각 10일과 11일 개별 일정으로 방한했으나 두 사람 모두 탈북자 사회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과 하나돌 학교를 방문하고 외교부, 통일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사실상 일정을 공유했음. 이에 따라 이날 회동은 그간의 방한 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임. 두 사람은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여야 한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로버트 킹 특사는 15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하며 문타폰 보고관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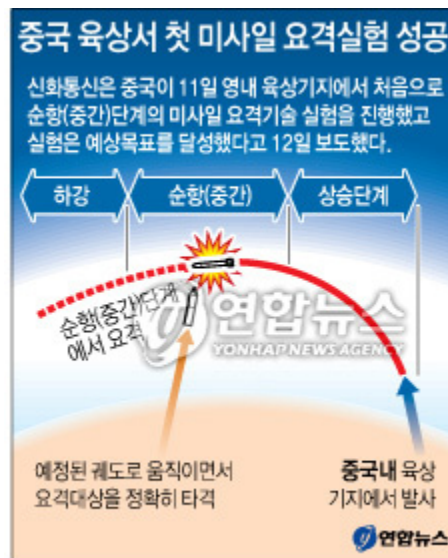


[참고 1] 美전문가 “中 2020년대 MD체계 구축”(연합뉴스, 1/13)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신화통신은 중국이 11일 영내 육상기지에서 처음으로 순항(중간)단계의 미사일 요격기술 실험을 진행했고 실험은 예상목표를 달성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육상기지에서 처음으로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한 중국이 2020년대 전국적인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할 것이란 미국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중국 동방망(東方網)은 워싱턴 타임스 12일자 보도를 인용, 미국의 군사문제 전문가인 릭 피셔 국제평가 및전략센터(IASC) 연구원이 “중국이 2020년대 중기에 전국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그래픽> 중국 육상서 첫 미사일 요격실험 성공



장성구 기자 sunggu@yna.co.kr 20100112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 피셔 연구원은 “중국 군부의 고위 관료가 최근 중국의 우주항공 정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군이 미사일 방어 임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이 업무는 핵심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2007년 1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지상 859km에 떠 있던 낡은 기상위성의 요격 실험에 성공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은 이 위성요격 시스템 기술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셔 연구원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매주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지만 이를 발표한 적은 거의 없다”면서 “이번에 관영 신화통신과 외교부를 통해 실험 성공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해 이번



실험 성공이 자체적인 MD 구축의 신호탄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 공군 관리 출신의 군사전문가 마크 스트로크도 “1980년대 말부터 중국은 미사일방어 기술과 육상기지에서의 우주레이더 시스템을 연구해 왔다”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미사일 수출과 MD 방어 체계 구축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면 중국 정부는 미사일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자체 (대공방어)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우주개발에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중국은 자체 조기경보기까지 보유한데다 이번에 미사일 요격 실험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중국의 자체 MD 구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11일 진행한 미사일 요격실험은 미국의 지상배치 중간단계 요격미사일방어체계(GMD)와 개념이 유사한 ‘지상 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이번 미사일 발사실험이 이른바 궤도 중간 단계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상 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 실험이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중국에 요구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지난해 건국 6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공개된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홍치(紅旗.HQ)9’가 이번 실험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S-300을 개량한 홍치9는 2단계 고체연료 추진 로켓으로, 사거리 최대 300km, 요격 고도는 0.5~1.5km로 알려져 있으며 첨단 레이더 차량 2대와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속도는 마하 2, 탄두무게 180kg, 명중률은 70~90%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이 중국이 자체 MD체계 구축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로는 이번 실험이 우주공간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번 요격실험은 미사일의 비행단계 3단계 중 시작 단계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비행하는 중간단계인 순항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탄도미사일의 궤도는 발사 직후 대기권을 치솟아 오르는 발사단계와 대기층 밖 우주공간에 이르는 중간단계,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로 분류된다. 이번 실험이 중간단계에서 이뤄진 것은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실험으로 우주공간에 파편을 야기하지도 우주비행체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았다”고 말해 실험이 우주공간에서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모린 셔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12일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돼 지구 대기층 외부에서 충돌하는 것을 우주에 있는 감시시스템을 통해 탐지했



다”고 말해 우주공간에서 실험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중국과 홍콩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은 미사일 요격실험 성공이 미국과의 군사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고 2] <인터뷰>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연합뉴스, 1/13)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유현민 기자 =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13일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에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누코프 대사는 이날 정동 러시아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누코프 대사와 일문일답 요지.

-- 올해는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전망은.

▲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자관계와 경제협력에서 큰 성과를 도출했으며 양국 정상간 공동 이해와 상호신뢰가 증진됐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양국 간 무역량이 10배나 증가해 현재 20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특히 오는 11월 한국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올해 방한한다고 들었다. 방한 일정과 의의를 말해 달라.

▲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논의 중이라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올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2008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모두 부지런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모든 일이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중요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한·러 대화(Korea-Russia Dialogue)가 출범할 예정이다.

▲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졸업한 상트페테르부르크대와 이 대통령이 졸업한 고려대간 대화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의된 것이다. 양국의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각 사회분야 간 교류를 크게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북핵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은 6자회담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은 빨리 재개돼야 하며 최근에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러시아는 언제든지 6자회담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 만약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말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이미 이뤄진 합의를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기본원칙을 담은 문건을 토대로 모든 참가국과 토론해 나갈 생각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에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해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과 전력망, 철도망 구축이 가능한가.

▲ 철도 관련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최근 북한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작년 7월에는 북한과 나진-하산간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러시아의 가스담당 공사와 전기담당 공사가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단계다. 모든 프로젝트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상황이다. 러시아는 몇 년 간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가스관과 전력망을 연결해 공동의 에너지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랜드바겐은 포괄적 개념이다. 이 문제도 그랜드바겐에 포함하기 위해 토론해 볼 수 있다.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 비핵화 문제도 중요하고 평화협정 문제도 중요하다. 어떤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할지는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이 토론해야 할 사안이다.